

9시 24분 청와대 전직원 인지한 참사 왜 대통령만 몰랐나

靑이 현재에 밝힌 세월호 당일 박대통령 7시간 행적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놓고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10일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박 대통령 측은 비록 관저에서 집무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관저에만 머무르는 바람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반박한다.

대통령과 국회 측이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10일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자료를 보면 이날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석명(釋明)을 요구했고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부 석명 사항에 대한 답변’이라는 A4 16쪽짜리 자료와 ‘진도 인근 구조작업’ 상황을 담은 국가안보실 보고서를 첨부 자료로 제출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 측은 ‘관저 집무실에서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며 정상적인 재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유기에 가까운 언행을 보여줬다”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오전 10시께 사고 발생 보고를 처음 받은 이래 20~30분마다 직접 유선 등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필요한 업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한 오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해 인명 구조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

“10시께 첫 보고 받고 업무 지시”
국회측 “보고·업무 지시도 없고
소재지 몰라 구조 골든타임 놓쳐”

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탄핵사유로 제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용어) 주장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반박한 것이다.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서면 위주 보고만 받은 것은 부작위라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의 일상은 출퇴근 개념이 아닌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며 “국가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직무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식 행사가 없는 경우에도 쉬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 머물며 비서실과 행정각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업무를 처리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이 현존하는 그곳이 근무처로 보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됐으며 대통령 측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청난 사고를 인지한 시점 자체가 지나치게 늦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이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었고 뒤늦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진 이후에도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또 박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는 바람에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경내에 마련된 국가 재난 ‘콘트롤 타워’인 위기관리상황실을 찾지 않은 것과 300여명의 구조가 존각을 다룬던 시점에 군·경 합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골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1시간가량 ‘올림머리’를 한 것 등도 ‘직무 태만’의 근거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거둬들인 여러 원인 중 가장 주된 원인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행동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능력·성실성을 근본적으로 회의하게 만들었다”며 현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호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10시 이전 구체적 행적 빠져 의혹 더 키워

박근혜 대통령 측이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자료는 참사 발생 1000일이 지나서야 내놓은 첫 번째 구체적 소명 자료다.

그러나 국회 측이 집중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오전 10시 이전 행적이 아예 빠져 있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대면 보고 시간도 누락돼 있는 등 소명에 걸린 시간에 견줘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측은 전날 현재에 낸 준비서면에서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30분~10시 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이나 윤전주 행정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전화 보고를 받을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국회의 이런 주장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것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특히 국회는 참사 당일 오전 9시24분 국가안보실

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문자를 이용해 세월호 참사 상황을 전파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 전 직원이 아는 세월호 참사를 통수권자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 국가안보실 서면보고로 36분이나 늦게 알게 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 측은 “윤전주, 안봉근, 정호성은 늦어도 9시 24분께에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인지했다”며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모종의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현재에 밝힌 7시간 행적 자료의 첫 시작은 오전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세월호와 무관한 국방 관련 사안 서면보고를 수령했다는 것이다. 즉 10시 이전의 구체적 행적은 빠져 있다.

앞서 현재에 증인으로 나온 윤전주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오전 9시께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본 뒤 오후에 다시 대면했다”고 진술했다. 윤 행정관의 증언으로도 박 대통령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묘연하다. /연합뉴스

선거연령 ‘18세 하향’ 국회 안행위 소위 통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지난 9일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자는 주장은 그동안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국회에서 입법의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견을 냈다.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주요 개혁입법 어젠다의 하나로 검토 중이며, 새누리당 또한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에 따라 개혁 드라이브를 걸 태세에서 선거연령 하향조정을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적인 추세 등으로 볼 때 우리도 선거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의 선거연령은 모두 18세 이하다.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16세 이상부터 투표가 가능한 곳도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보다 선거연령이 높았던 일본도 지난해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 선거연령 하향 문제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여야 간에 엇갈리는 정치적 이해득실 때문이었다. 청년층 지지대에서 약세를 보이는 보수정당에서 부담스러워 했던 것이다.

아직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남아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여권에서 반대하기 힘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거연령 하향 조정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분석이다.

여권의 한 의원은 10일 “여권으로서도 12월 대선 실시를 기준으로 할 때처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명분은 얻되 손해는 크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추진

“참고인 구인 가능하게 법개정”

더불어민주당 박원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특검검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벌 대기업이 줄줄이 연루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뇌물수수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특검이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있다.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보는 국민의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으로서 모르

쇠로 일관하거나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모습이 보인다”며 “특검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상 ‘인지된 관련사건’ 용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원래 범주지와 어긋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특검법 개정을 1월 국회에서 4당 협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국조 특위 위증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구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발의해 1월 국회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